

정쟁만 난무... ‘결정적 한방’ 없었다

野 ‘미르·K스포츠’ 정권 개입 의혹 제기...근거 제시 못해
與,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거부...청와대 엄호만 급급

20대 첫 국감 전반전 평가

과행으로 시작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는 정쟁으로만 얼룩지고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은 국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 정권 실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은 청와대를 엄호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나서 지난 4~5일 이들은 국감이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6일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또 다시 파행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열쇠를 쥔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 교문위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씨의 딸의 대학입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와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교문위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된 국감 전반전에 대해 여야가 내린 평가는 사뭇 달랐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의 실체 없는 정치공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파고들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야당의 주장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할 때 민생 국감 하러 돌아오라고 부르짖던 야당은 온데간데없고 정치공세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정계에 관한 논의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번 국감과정에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노력으로 미르재단 의혹의 파장을 맞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의혹 해소의 실마리가 될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준으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옳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후반기에는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잡혔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썰값 대책을 세워왔듯이 국감장 안에서도 민생만을 염두에 두고 정부견제와 정책대안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낱알이 밝히고 불거진 의혹은 해소하겠다”고, 국민의당 김 수석부대표는 “여당 설득과 야권공조로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각각 다잡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세청 및 6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국세청장,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연합뉴스

국회의원 세비 삭감·금배지 폐지

‘특권 내려놓기’ 최종안 확정...국감 과도한 자료 요구 지양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를 줄이고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확정했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져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 된다.

추진위는 우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임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의 추

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껏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 자체를 없애고 수당으로 통합하면 세후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임법활동비·정책연구비 등 항목으로 이뤄진 수당 1031만원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115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등 지원 경비 770만원도 별도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다단해 한 번에 개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

원 보수상정위원회(가칭)’를 꾸려 나중에도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러 놓고 묻지도 않는’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을 줄일 계획이다.

또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 포기과 관련해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비판을 들었던 출판기념회는 개최 전 산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하되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도만 허용키로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하고, 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를 일반인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야권 ‘호남 소외 발언’ 비판 서글퍼”

“부정청탁의 피해자란 뜻”...야 “공직자 명예 훼손”

“정말 서글프다. 호남 인사 소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일 저녁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김영란 법과 호남인사 소외를 연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일제히 비판한데 대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직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과 학연 등을 기반한 세력이 공공연히 (청탁 등을 통해)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능력 있는 호남 공직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며 “김영란 법으로 이러한 청탁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직 사회에서의 ‘짬짜미 밀어주기’가 김영란 법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취지였는데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국해하거나 매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야권은 호남의 소외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한 원인이 됐다는 나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 보다는 일방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서



글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전북 정읍에서의 열린 축산인·농민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인사와 부정청탁으로 호남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고 나라와 사회가 좁혀졌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 나아가 지역감정을 완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더민주 기동민 대변인은 “이 대표는 호남사람이면서도 호남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이 부족해 그런 얘길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발언은 호남을 우롱하는 발언이며 청탁하게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부정 청탁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일주일 동안의 단식을 마치고 민생 탐방에 나서고 있는 이 대표는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 호남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前 검찰총장, 수사 무마 대가로 20억원 수수”

더민주 박영선 의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자료로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료로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

에게) 2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수환 국세청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원장은 다음날 “조만간 열리는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추가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학규 복귀 수순...오늘 강진서 송별회

전남 강진에 옮겨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지역 인사들과 송별 모임을 갖는 등 정계 복귀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강진 주민들을 상대로 고별 강연까지 한 만큼 이날 모임은 그동안 집거생활을 도와준 지인들과 정치 일선 복귀 전 ‘최후의 만찬’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손 전 대표 측근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오는 10일 강진군 백련사 회주

여연 스님, 이낙연 전남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과 만찬을 나눌 예정이다.

손 전 대표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을 통해 분야별 정책입안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공식 정계 복귀와 함께 11월에는 재단 10주년 행사를 대규모 심포지엄 또는 정책 세미나 형태로 열고 비전 등을 내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